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3년 9월 9일 (토) 조간부터
[인터넷 기사] 2023년 9월 8일 (금) 16:00이후 가능

[연구관련]
전승훈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053-850-6214, jsh1105@daegu.ac.kr)
담 당 자 김홍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4, hjkim88@kli.re.kr)

김기웅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044-287-6571, kiwoong913@kli.re.kr)

배포일시 2023년 9월 8일 (금) 11:30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

□ 본 연구는 외식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간의 공정성 개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가맹사업의 현황

-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 가맹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단,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5〉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명, 십억원, 백만원)

	2020	2019	2018	2017	2016	연평균증가율
사업체수	139,816	125,634	123,178	116,965	112,827	5.5
매출액	32,654	32,848	29,925	26,044	23,659	8.4
영업이익	2,835	4,146	3,205	2,656	2,447	3.7
종사자수	451,295	482,865	477,315	433,729	414,924	2.1
인건비 총액	4,972	5,335	4,619	3,855	3,331	10.5
사업체당 매출액	234	261	243	223	210	2.7
사업체당 영업이익	20	33	26	23	22	-1.7

사업체당 종사자수	3.2	3.8	3.9	3.7	3.7	-3.2
종사자 1인당 인건비	11.0	11.0	9.7	8.9	8.0	8.2

자료 : 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 각년도

2.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라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체계의 구축과 신뢰·소통이 성과 달성의 전제가 되나, 2008~2019년 기간 분쟁조정 접수 후 조정이 이루어진 분쟁건수가 6,865건에 달할 정도로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17.7%),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의무(19.8%) 등 가맹계약 전 단계 정보 제공의무와 관련된 사안이 많았음

〈표 6〉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유형

		신청 건수	비중
가맹금 예치 의무		73	1.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1,213	17.7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1,362	19.8
불공정거래 행위	거래 거절	230	3.4
	구속조건부 거래	354	5.2
	거래상 지위 남용	300	4.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35	4.9
영업지역 침해		332	4.8
부당한 계약 종료		211	3.1
부당한 계약 해지		365	5.3
상표 및 의장권 침해		3	0.0
기타		2,087	30.4
전 체		6,865	10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3. 가맹사업 공정경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정착이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추정함
- 분석결과 계약단계 허위·부실정보 개선은 전체 가맹사업의 중

- 사자 수를 약 0.2%, 정보 부실제공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약 1.4%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운영단계 일방적인 영업비용 증가 개선은 전체 가맹사업의 종사자 수를 약 0.1%, 정보 부실제공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약 2.9%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전체 가맹사업의 종사자 수를 약 6.0%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표 7〉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양: 종합

(단위: %, 점)

	기준선	추정결과	증가율
정보 허위·부실제공 개선	482.9	483.8	0.2 (1.4)
일방적 영업비용 증가 개선		483.4	0.1 (2.9)
정부 정책의 효과		511.9	6.0

주: ()는 해당 사례로 피해를 본 가맹점 종사자 수 대비 증가율임.

- 가맹사업 공정성 개선이 근로형태별 종사자 비중, 시간당 임금, 주당 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자 비중 등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표 8〉 공정성 개선과 고용의 질: 종합

		정보 허위 부실제공 개선	일방적 영업비용 증가 개선	정부 정책 효과
근로 형태별 비중	상용근로자	0.03%p 감소*	0.91%p 증가	0.06%p 감소*
	임시 및 일용	0.73%p 증가	0.84%p 감소	1.51%p 증가
	무급 및 기타	0.15%p 감소	0.31%p 증가	0.30%p 감소
시간당 임금	상용근로자	0.06% 인하*	2.01% 인상	0.11% 인하*
	임시 및 일용	0.39% 인상	0.64% 인상	0.81% 인상
	자영업자	2.21% 인상	1.26% 인상	4.57% 인상
주당 근로 시간	상용근로자	3.45% 증가	11.57% 인상	7.13% 증가
	임시 및 일용	8.06% 증가	4.09% 감소 *	16.66% 증가
	자영업자	0.56% 증가*	2.90% 인상	1.16% 증가*
사회보험가입자비중		0.30%p 감소	0.58%p 증가*	0.62%p 감소

주: *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의미임

4. 가맹사업 공정성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가맹계약 전 단계 :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서 내용 구체화 필요
 - 가맹사업의 매출액 정보를 계절적·지역적 특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공
 - 월별 사업체 현황을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여 제도
 - 주요 분쟁 내용 중 하나인 원부자재 유통마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의무 납품품목 현황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관련 교육제도 신설
- 계약이후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필수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상호이해 마련 필요
 - 온·오프라인 영업권 관리 규정 개선을 통해 영업지역 보호 및 배달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른 영업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규정 마련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필수납품 품목 명시화, 품목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사업주 선택 권한 제공 유도 방안 마련
 - 가맹점의 필수품목 비용 대신 정률형 로열티 지불 방식으로의 대체 유인 마련 끝.